

이슈브리프 806호
(2026. 2.25)

대서양 동맹의 국제질서 인식 격차와 시사점: ‘민헨 안보회의 2026’ 중심으로

제806호

홍건식 hks21c@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뮌헨 안보회의(MSC)는 미국과 유럽 간의 심각한 인식론적 단층선을 노정하며, 대서양 동맹의 근본적인 재편과 글로벌 안보·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냉전 후 자유주의적 환상이 초래한 서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비판하며 국가 이익 중심의 '서구 문명 재건'을 주창한 반면, 유럽 리더들은 이를 강대국 정치의 퇴행적 부활로 규정하며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립'을 촉구했다. 이러한 균열은 신현실주의적 이익 추구하고 제도적 자유주의의 긴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으로, 이 차이가 오히려 동맹 재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MSC에서의 정치 지도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들의 인식 차이를 검토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제어 : 뮌헨, 안보회의, 서구 문명, 루비오, 유럽

지난 2월 13일부터 독일 남부에서 개최되었던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MSC)가 15일 폐막했다. 1963년 냉전기 창설 이래 유럽 최대의 안보 포럼으로서 그 위상을 지켜왔으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 속에 폐막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25년 미국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의 회의론적 발언과 그린란드 영유권을 둘러싼 미-유럽 간의 외교적 마찰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개최되어,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탱해 온 대서양 동맹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이번 안보 회의를 두고 대서양 동맹의 험난한(rocky) 관계,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는 대서양의 전환점(turning point),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서방 대 서방(The West vs. the West)’으로 규정하는 등, 가치보다 거래적 실리가 우선되는 ‘다극화된 무질서’의 시작을 경고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2025년보다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양측의 상이한 국익과 세계관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미-유럽의 국제질서 인식과 패러다임의 충돌

이번 MSC의 연례 보고서¹⁾ 제목인 ‘파괴 중(Under Destruction)’은 미국 주도의 질서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구조적 균열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현 상황을 기존 규범을 파괴하는 ‘불도저 정치’와 ‘철거 작전’에 비유하며 질서의 해체를 경고했다.

1) MSC 2026 보고서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7741&bbsId=ib&page=1&searchCnd=100&searc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Joachim-Friedrich Marin Josef Merz) 총리는 개막 연설을 통해 “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으며, 힘과 강대국 정치가 지배하는 노골적인 시대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자유무역과 동맹의 신뢰 회복이라는 자유주의적 제도 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장관의 시각은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는 미국을 ‘유럽의 자녀’(Child of Europe)로 칭하며 미국과 유럽이 문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지정학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냉전 종식을 ‘역사의 종말’로 보았던 자유주의적 확신은 ‘환상’이었으며, 이 ‘환상’이 서구 문명을 오히려 나약하게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서구 세기’의 재건을 위해 규칙 기반 질서라는 명분보다는 국가의 힘과 실질적 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 관계로의 전환을 유럽에 강력히 주문했다.

원인 진단: 지정학적 위협 vs 내부 구조적 약점

국제질서의 위기 원인에 대해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침공과 같은 외생적 지정학 요인을 강조했다. 특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리더십 상실이 힘의 공백을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위기의 근원을 서구 내부의 ‘경제적 취약성’에서 찾았다. 그는 무분별한 세계화로 제조업 기반을 상실한 점, 핵심 공급망을 경쟁국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점, 그리고 엄격한 기후 정책과 이민 문제가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현재의 질서 변화를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적

재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결책 또한 평행선을 달렸다. EU는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재무장과 파트너십 확대를 대안으로 삼았다. 유럽의 재무장 가속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우크라이나 군사·외교 지원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유럽이 '생존 의지'를 갖춘 동맹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며, 재산업화, 공급망 주권 회복, 미래 기술(AI, 자동화) 협력, 국경 통제 강화 등 현실주의적 국가 주권 강화를 세부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서양 동맹의 '거래적 재편'과 글로벌 리스크

국제질서는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 규범, 제도 등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MSC 회의에서 미국의 루비오 국무 장관은 냉전 후 자유주의적 환상이 초래한 서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비판하며 국가 이익 중심의 '서구 문명 재건'을 주창했다. 반면, 유럽 리더들은 이를 강대국 정치의 퇴행적 부활로 규정하며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립'을 촉구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MSC 회의에서 나타난 미국과 EU의 균열은 미국의 신현실주의적 질서에 기반한 이익 추구와 EU의 제도적 자유주의 질서와의 긴장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대서양 동맹을 전통적인 가치 결사체에서 '거래적 파트너십'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보조금 분쟁이 동맹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유럽 강대국화를 주장했으며, 영국 총리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 다각화'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측면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쟁점 사안이다. 현재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루비오 장관은 이번 자리를 통해 대서양 동맹국인 유럽의 ‘문명 재건’을 위해 스스로 방어할 수단과 생존 의지를 갖춘 유럽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거래적 접근’이 강화되어 지원이 축소될 경우, 유럽의 단독 부담 증가와 함께 서방 내부의 심각한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제 안보 영역에서 미-유럽이 각자의 자립을 우선시할 경우, 이는 공동 대응보다는 정책 불일치를 심화시켜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게 전략적 틈새를 제공할 위험이 상존한다.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전략적 시사점

유럽의 자립 노력과 미국의 서구 재건 담론은 그리고 다극적 무질서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미국 의존 탈피는 유럽의 재무장 가속화, EU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무역 블록 형성을 촉진 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유럽의 자립 추구는 한-EU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다각화와 지정학적 균형을 모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한-EU 관계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유럽의 공급망 다각화와 재무장 흐름은 한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다. 우리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24.11월 체결)을 기반으로 방산 협력 심화 및 안보 협의체 신설을 고려하고, 한-EU FTA 고도화 등으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유럽의 자립 과정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미국에 편중된 안보 의존도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미 동맹의 기능적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루비오 장관이 주창하는 ‘힘에 기반한 질서’를 고려하여, 한국이 수혜자가 아닌 ‘기여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OPCON) 이양과 핵 추진 잠수함 협력 등 실질적인 안보 주권과 억제력을 확보하는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경제 안보 전략 구상과 이행이 필요하다. 미-유럽 간의 무역 블록 형성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한국의 독보적인 제조업 및 방산 역량을 활용해 서구 재산업화의 핵심 연결고리(Linchpin)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의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강대국들의 인식 차이를 예리하게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